

“두산 박정원 · 박지원 일가 퇴진하라”

그룹사 지회 구조조정 저지 투쟁대책위 구성 ... “고통 전가 중단, 매각 시 고용·노조 승계 보장”

두산 자본이 두산중공업 노동자 추가 명예퇴직과 계열사 매각까지 거론하며 방만한 경영으로 벌어진 위기의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고 있다. 두산그룹 노동자들은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투쟁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공동투쟁에 돌입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와 두산중공업 지회, 두산모트롤지회, 두산메카텍지회, 두산인프라코어지회(군산분회) 등 두산그룹 계열사 지회 대표자들이 5월 14일 서울 동대문 두산타워 앞에서 ‘두산그룹 구조조정 저지 투쟁 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책위는 앞서 13일 창원시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투쟁을 선언했다. 대책위는 첫 공동투쟁으로 (주)두산 이사회가 열리는 14일, 두산타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정원, 박지원 일가 경영 일선 퇴진 ▲계열사 매각 시 고용과 노조 승계 보장 ▲두산중공업 구조조정 중단 등을 요구했다.

이성배 노조 경남지부 두산중공업 지회장은 14일 기자회견에서 “사측은 지난 2월에 이어 명예퇴직 신청을 강요하며, 한 푼이라도 더 줄 때 나가라고 압박하고 있다”라고 비판

했다. 이성배 지회장은 “그룹 전체로 구조조정이 번지는 양상”이라며 “계열사 매각 등 구조조정에 관한 대책 어디에도 노동자의 고용 대책은 없다”라고 탄식했다.

“박 씨 일가가 망치고 노동자가 책임져”

두산중공업은 지난 2월 노동자 750명을 명예퇴직이란 이름으로 쫓아냈고, 5월 11일부터 15일까지 만 45세 이상 직원 2,000여 명을 대상으로 추가 명예퇴직 신청을 받고 있다.

김성완 노조 두산모트롤지회장은 기자회견 발언을 통해 “대한민국 1위의 굴삭기 유압부품 생산업체인 두산모트롤 매각은 땀 흘려 일한 노동자의 뒤통수를 치는 배신”이라고 비판했다. 김성완 지회장은 “(주)두산 이사회는 박씨 일가에 부실경영 책임을 물어 해임하고, 노동자 충고

용을 보장하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진기석 노조 두산인프라코어 지회장은 기자회견에서 두산그룹이 4세 세습 경영을 이어오며 위기 때마다 계열사 매각으로 위기를 노동자에게 떠넘겨 왔다고 비판했다. 진기석 지회장은 “부실경영으로 위기를 만들고 인원 감축, 계열사 매각을 추진하는 무책임한 박정원, 박지원 일가를 그냥 둘 수 없다”라고 분노했다.

두산그룹은 지난 4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채권단에게 자산과 계열사 매각, 유상증자 등을 담은 3조 원 규모의 재무구조 개선계획(자구안)을 제출했다. 두산그룹은 두산모트롤을 공개 매각하기로 했다. 두산솔루스, 두산건설, 두산메카텍, 두산큐백스 등도 매각 대상으로 거론하고 있다.

두산중공업지회는 두산그룹이 2019년 999억 원을 현금 배당했고, 이 가운데 박정원 회장과 박지원 부회장(두산중공업 회장) 대표 일가가 497억 원을 가져갔다고 밝혔다. 박씨 일가는 2018년 585억 원, 2017년 576억 원을 챙겼다. 박정원은 지난해 구조조정을 저지르며 급여와 상여금으로 30억 9,800만 원을 받았다.

“이재용 씨, 사과는 됐고, 노조파괴 중단 대책 내놔”

삼성 불법사찰 시민사회 공동대응 기자회견 ... ‘대법 실행 피하기’ 거짓 사과 규탄

‘삼성 불법사찰에 대한 시민사회 공동대응(아래 공동대응)’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대국민 사과를 규탄하며, 대국민 약속에 관한 구체 대책을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금속노조, 참여연대 등 16개 단체가 만든 공동대응은 5월 12일 오전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삼성 이재용 사과 관련 공동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재용 씨는 5월 6일 무노조 경영·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불법행위에 관해 사과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공동대응은 “삼성준법감시위원회 주문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라며 “진정성과 실효성이 전혀 없는 대법원판결을 위한 면피용 사과”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삼성준법감시위는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삼성그룹 내부 준법감시체도를 만들라고 주문함에 따라 지난 2월 출범했다.

조장희 금속노조 경기지부 삼성지회 부지회장은 “노조파괴 중단 등 해결방안 제출은커녕 피해 노동자에게 제대로 사과하지 않았다”라며 “삼성준법감시위가 시키는 대로 움직였을 뿐”이라고 말했다. 조장희 부지회장은 “언론과 정치권이 이재용 씨 사과를 좋게 평가하는 이유를 도통



모르겠다”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조장희 부지회장은 “삼성준법감시위 설치부터 사과 기자회견까지 모두 이재용의 실행 선고를 막기 위한 사법 거래용인 듯하다”라며 “노동자 피해 사례와 해결방안을 몇 차례 삼성준법감시위에 전달했지만 묵묵부답이었고, 피해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려는 의지도 없었다”라며 삼성준법감시위 한계를 지적했다.

공동대응은 특히 “삼성의 노조파괴와 노조탄압이 현재진행형인데 사과와 개선 약속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용 씨는 6일 기자회견에서 “무노조 경영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 노사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노동 3권을 보장하겠다”라고 말했다. 공동대응은 “그룹 차원의 조직적인 노조와해 공작 혐의로 실행을 선고받은 삼성 임직원들은 자리를 보전하고 노조탄압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삼성에버랜드 노동자들이 가입

한 금속노조 삼성지회에 따르면 정금융 삼성물산 리조트부문 대표이사는 삼성그룹 옛 미래전략실 출신이다. 노조 와해를 기획·진행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유죄를 선고받았다. 정금융 씨는 삼성에버랜드가 속한 삼성물산에서 대표이사직을 유지한 채 금속노조 교섭 요구를 거부하며 노동조합 단체교섭권을 박탈하고 있다.

공동대응은 “수십 년간 조직적으로 실행한 노조파괴, 불법사찰이라는 중대 범죄에 대한 사과를 이재용 개인 범죄의 대가를 가볍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했다”라며 “삼성은 준법감시위 뒤에 숨어 허울뿐인 사과문 발표를 반복하지 말고, 진짜 사과를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조장희 부지회장은 노조파괴 등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즉각 시행하고, 각 사안에 대한 재발방지·피해자 구제 대책을 구체적으로 마련, 시행하라고 요구했다.

조장희 부지회장은 “입에 발린 사과로 얼렁뚱땅 넘어가지 못하도록 금속노조와 삼성그룹사 노조들이 더 크게 목소리를 내야 한다”라며 “결국, 한국 사회 재벌체제 청산이 핵심이다. 재벌 개혁을 위한 행동에 노동조합이 나서야 한다”라고 호소했다.